

민주연구원 “지역 상생형 ‘AI 데이터센터’ 확산 방안”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3월 10일(화), “지역 상생형 ‘AI 데이터센터’ 확산 방안-지역혜택공유협약(CBA) 도입 제안”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경제적 가치가 커지는 반면, 전력·용수를 공급하는 비수도권에 빛·소음·환경 부담이 누적될 경우, 혜택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위험은 지역이 떠안는 불공정 구조로 인해 향후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질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브리핑은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면서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형 CBA 모델을 제안했다”며 “CBA 도입은 AIDC 확산을 늦추는 추가 규제가 아니라, 갈등과 불확실성을 줄여 산업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DC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키우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형 AI 인프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AIDC가 24시간 가동되는 ‘전력 블랙홀’로서 지방의 전력·용수·환경 자원을 집약적으로 소모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AIDC 선도국인 미국에서 소음·환경오염·전기요금 인상 우려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취소·지연된 ‘테크래시(Techlash)’ 사례를 짚으며, 한국 역시 갈등과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이 정책브리핑은 기업·지자체·주민이 사전에 법적 협약을 맺는 지역혜택공유협약(CBA)을 제안하며,
 - 전력·용수 사용 상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전기요금·환경을 공공 대시보드에 정기적으로 정보 공개,
 -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IT·AI 교육,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에너지 복지 펀드

및 '데이터 연금' 형태의 이익 공유.

- 협약 미이행 시 지원을 회수하는 '혜택 환수(Clawback)'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상생 위원회(CAB)의 상시 점검 등을 핵심 조항으로 제시했다.
- 이 정책브리핑은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특별법 논의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구, 직접 전력거래(PPA) 특례 등을 CBA와 연계해,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지역 자원 주권과 이익 공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방향도 제안했다.
- 조세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된 CBA 선제 도입은 ‘전력 블랙홀’ 급 AIDC 설립이 본격화되는 미래에 비수도권이 ‘에너지 약탈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국가 AI 전략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